

집값 잡으려다 경제 망치나

무리한 대출규제·건축, 가계빚만 부풀려 부동산시장 급랭 장기불황 위기 올수도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전방위적인 주택관련 대출 규제와 긴축적 통화정책을 지속할 경우 우리 경제가 장기불황 등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경제위기 시나리오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집값 급등 이후 쏟아지고 있는 정부의 각종 '긴축 카드'에 대한 과급효과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다 개헌정국, 현대차 파업 등 곳곳에 악재가 도사리고 있어 경기 회복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4일 '가계발 금융위기, 해법은 있다'란 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내 경제는 자금의 단기부동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

다"면서 "무리한 대출규제나 긴축적 통화정책이 계속될 경우 경제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매출 늘고 거래 중단 주택시장 긴 '겨울잠'

1·11대책 후 광주·전남 보합세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원가공개 확대를 끌자로 한 정부의 1·11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국의 주택시장이 깊은 '겨울잠'에 빠졌다.

1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1·11대책 이후 일부 아파트는 추가 매물이 잇따르는가 하면 재건축 단지의 호가 하락도 가시화되면서 사실상 전국의 주택시장이 거래 중단상태에 접어들었다.

광주·전남은 비롯한 지방에서도 지난해 11·15대책 이후 거래가 자취를 감춘 가운데 연초 비수기와 1·11대책 등이 맞물리면서 판매세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는 지난해 매매가가 크게 오른 남구의 매매·전세가가 올 들어 보합세로 접어들었으며, 전남도 지난해 11월 이후 두 달째 '제자리 걸음' 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주택대출 건수 안줄이면 3개월내 압류·경매 조치

1년 유예기간 지난후

투기지역에서 2건 이상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유예 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안에 대출 건수를 줄이지 않으면 금융기관이 압류와 경매 등 강제 상환 절차를 밟게 된다. 또 이미 담보대출이 있는 사람

이 기준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투기지역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이후에 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기존 주택을 팔아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런 내용의 복수 대출 규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해 예상되는 대출 규제를 예상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담보대출이 이뤄졌다.